

COMMENT Industry



Analyst
김도하
doh.kim@sk.com
02-3773-8876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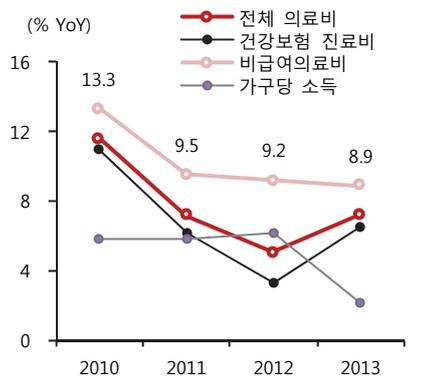
실손보험료 인하는 부정적. 비급여 의료비의 억제책 병행을 기대

국정위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민간보험사의 부담영역이 축소되는 데 따라 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정책 목적은 국민 의료비 적정화인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가파른 증가에 있음. 실손보험료 인하는 보험업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나, 향후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억제책이 병행될 시 본질적인 손해를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법 제정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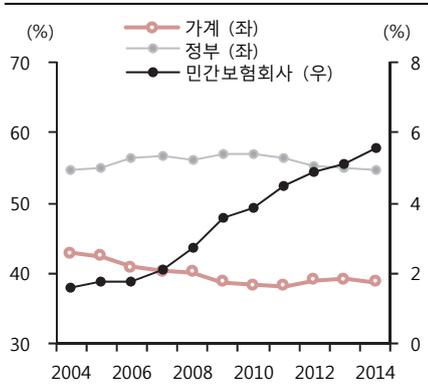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 논리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로 민간보험사의 부담영역이 축소되므로 그 수혜분(3년 간 업계 반사이익 총 1.5조원 추산)을 실손보험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중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를 현황을 분석하고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2018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위험률 조정안도 다시 $\pm 25\%$ 로 제한할 전망이다(실손보험 위험률 조정안도: ‘15 $\pm 25\%$ \rightarrow ‘16 $\pm 30\%$ \rightarrow ‘17 $\pm 35\%$ \rightarrow ‘18 폐지 예정이었음)

그림 1. 개인의료비 연간 증가율



자료: 보건복지부, SK증권

그림 2. 부담주체별 개인의료비 부담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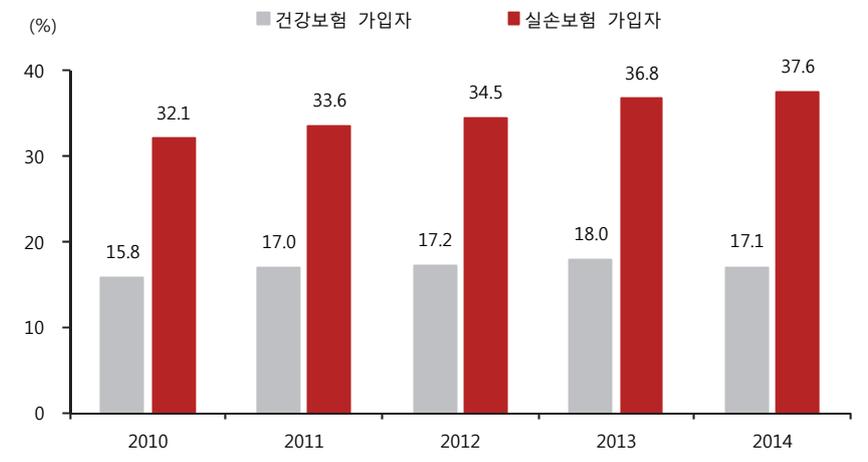
비급여 의료비 억제책 병행 시, 본질적인 손해를 안정화 기대할 수 있을 것

해당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있음. 국민 의료비는 2010년~2013년 평균 7.8% YoY 증가했고, 그 중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은 동기간 평균 10.2% YoY를 기록해 동기간 가계소득 증가율 평균 5.0% YoY를 상회함(그림 1). 2014년 개인의료비 중 가계의 부담비중은 2004년 대비 4.1%p 감소한 반면, 민간보험사의 부담비중은 4.0%p 증가해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비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그림 2). 또한 2014년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17.1%인 데 비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37.6%로 2배 이상을 기록(그림 3). 종합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편중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국민 의료비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는 한계가 존재.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 확대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필요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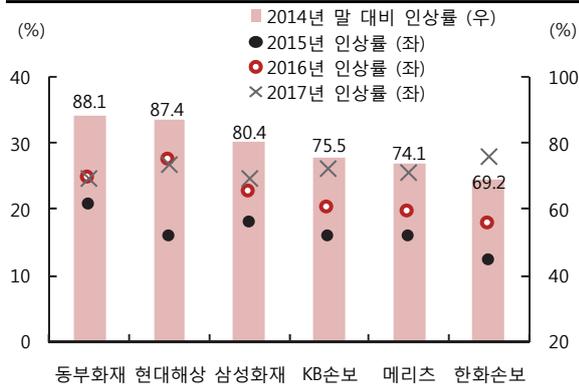
현재 100%를 큰 폭 상회하는 실손 손해를 고려할 때, 실손보험료 인하는 보험업종(특히 손해보험업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임. 다만 향후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될 경우에는 본질적인 손해를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그림 3.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 비중: 실손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2 배 이상



자료: 보험개발원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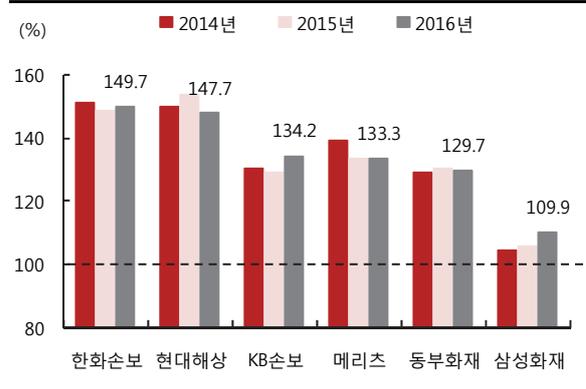
그림 4. 상장 손보사의 실손보험료 인상률



자료: 손해보험협회 SK 증권

주: 좌측은 직전년도 말 대비 인상률

그림 5. 상장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자료: SK 증권

주: 2009년 표준화 이후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개 담보기준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 단계(6개월 기준) 25%이상→적극매수/10%~25%→매수/-10%~+10%→중립/-10%미만→매도